탄력 받은 '광주 문화수도'

남은 과제와 전망

정부, 규모축소 생각 버려라

특별회계 외 별도 예산 지원책 필요
'역할 분담론' 철회·조성위 발족 시급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인 '특별회계' 설치와 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의 법적 모태인 '광주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광주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문제가 정부·여당간에 타결됐다. 특히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던 한나라당도 이날 광주에서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특별법 통과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 문광부 등 정부 각 부처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가 문화전당 건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2010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2023년 완공 목표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한다.

◇**특별회계**=당정 합의로 인해 특별회계 설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2조원은 사실상 문화전당과 그 주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문화중심 사업에 대한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회계 외에 '문화수도 특별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회계를 국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좀 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중심도시 사업 축소 및 지연**=기획예산처와 문광부 등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문화전당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문화전당 기본설계(중간보고)에 따르면 문화전당 내부주차장은 당초 100대 규모에서 600대로 확장시키는 대신 외부주차장(4곳 정도, 1천면~2천명)은 완전히 삭제, 사실상 문화전당의 규모를 줄였다. 외부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줄이기 위해 내부주차장을 확장시키려는 기획예산처의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외부주차장이 없어질 경우 사실상 문화전당은 시민공원이자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건립 취지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기획예산처 등은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문화전당에 대해 연도별 착공이나 연차별 완공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원래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할 분담론**=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전당에 관련된 지원은 정부가 책임지겠지만 광주 도심에 대한 리모델링과 도로 개선 등 도시재구성은 시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전당 주변과 도시 재구성에 소요될 예산은 대략 1조원에 달해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문화중심도시를 포기해야 하며, 그저 문화전당 하나에 만족해야 하는 수준이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표류**=제2기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위원장을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민간 위원 구성에 대한 차질로 인해 무려 4개월이나 표류하면서 국가 사업으로서의 권위 마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회계 설치와 특별법 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급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성위원회의 발족이 우선돼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나라당과 광주시와의 정책협의회가 1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과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전당내 주차장 확충 시민단체 잇단 반대성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주차장 확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참여자치21·광주경실련 등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문화전당 내 주차장 규모를 100대에서 600대로 늘리는 것은 친환경적인 설계로 평가를 받은 건축 설계 이미지를 상실시키는 것"이라면서 "내부 주차장 확충 계획을 완전 철회하고 문화전당이 생태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전당 내부주차장 확장은 전당 주변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보다는 차량 이용을 부추기게 돼 '차없는 거리'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또 "전당 내부 주차장 확충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문화전당은 문화활성화와 도심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못하고, 주변 환경도 열악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나라당 대호남 사과 정책적 지원 뒤따라야"

우리·민주당 "반성·사죄 필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대호남 사과'와 관련, 진정성이 담긴 반성과 사죄, 호남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한나라당의 '호남공략' 행보에 대해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진정성이 없다면 닫혀있는 호남 민심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결자해지 자세는 좋은 일이고 환영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만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군사독재, 지역주의,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 대표가 호남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영남중심 군사정권이 호남인에게 준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인 상처를 감안하면 그의 사과는 너무 미미하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민주 동교동계 한자리에

내일 'DJ 피랍 생환' 33돌 맞아
정계개편 맞물려 정치권 촉각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려나간 동교동계 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東京) 피랍 생환 기념일'을 맞아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 동교동계 인사 20여명이 생환기념일을 하루 앞둔 12일 김대중 도서관에 모여 조촐한 기념행사를 갖는 것이다. 동교동계의 이런 움직임은 정계개편을 앞둔 현 정치상황과 맞물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월 13일은 1973년 김 전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박정희 정권'의 지시를 받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생환한 날로, 올해는 DJ의 33번째 생환일을 맞아 동교동계 인사들이 기념미사 및 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당 동교동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다는 것만으로 이들의 만남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관심은 예사롭지 않다.

7·26 재·보궐선거 이후 양당 내에서 범여권 통합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최근 당.청갈등 상황과 맞물려 정계개편 구도를 염두에 둔 여당내 물밑 움직임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념행사 참석자들의 면면만 봐도 양당 내에서 범여권 통합론 등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다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희상 배기선 이석현 염동연 정동채 유선호 전병헌 최 성 의원 등 10여명이, 민주당에서는 한화갑 대표와 김옥두 배기운 윤철상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과 박금옥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당과 민주당의 참석 대상자들은 순수한 기념행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정치권 새틀짜기 논의가 관심을 받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일 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참석 대상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기념행사가 계획됐지만 김 전 대통령이 폐렴증세로 입원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며 "올해도 생환기념일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조직개편안 진통 15일만에 통과

의회, 정원조례 등 2건 가결
월말께 직제개편·인사 단행

진통을 거듭해왔던 전남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10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전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전남도 민원메신저운영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됐던 전남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 2건이 15일여만에 마무리돼 집행부가 본격적인 후속인사를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가결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논란이 돼 왔던 정무부지사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또 개발과 보전의 상충문제를 불러온 경제과학환경국의 환경관련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해 경제과학환경국을 경제과학국으로, 해양수산국을 해양수산환경국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밖에 쟁점이 돼 왔던 행복마을과는 원안대로 행정혁신국에 두기로 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별정직 공무원 3명 증원건도 원안가결했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전남도는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8월 말께 직제개편과 함께 부단체장 및 서기관급을 포함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민선4기 출범에 맞춰 단행될 전남도 조직개편은 '지원부서 축소와 경제부서 확대' 원칙에 맞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과 등 3개 과를 신설한다. 또 총무과와 행정과를 총무행정과로, 경제통상과와 기업지원과를 기업통상과로, 기업도시기획단 기획총괄팀과 기업도시개발팀을 기업도시과로 통폐합하는 등 총 6개 과를 통폐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업도시기획단의 투자유치팀은 투자정책관으로 승격시켜 경제과학국 소속으로 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행복마을과를 설치키로 해 향후 성과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10개 실국 43개 과인 현행 기구를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공무원 정원만 20명 감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조직개편 작업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와 의회의 태도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의욕만을 앞세운 집행부는 조직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